Department of Justice

FOR IMMEDIATE RELEASE CRT
Friday, March 5, 2021 (202) 514-2007
WWW.JUSTICE.GOV TTY (866) 544-5309

법무부 민권부 선임 부차관보 파멜라 칼란 성명서

“미국은 현재 편협성과 증오를 부추기는데 기름을 붓는 행위 같은 전례에 없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증오 범죄는 용납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계속해서 이러한 끔찍한 범죄로부터 우리 이웃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자원을 동원 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우리의 강력한 민권부를 통해 민권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수사 및 처벌, 그리고 불법적인 차별의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 구현에 단호합니다. 또한, 민권부는 지난 몇달간 증오 범죄 및 다른 민권 범죄를 인지, 수사 그리고 기소할 수백명의 연방 검사 및 법 집행관들을 훈련시켜 왔습니다. 민권부는 또한 잠재적 증오 범죄 평가를 위해 지역 법 집행기관과 함께 일하는 연방 수사국 및 연방 검찰청의 동료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 수사국은 범죄 수사에 대한 지원을 제공해 왔습니다.

“민권부 범죄과는 전국적으로 연방 수사국 및 연방 검찰청과의 협력하에 증오 범죄, 공무상 직권남용, 그리고 다른 형사상 민권침해를 적극적으로 기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권부 다른 부서들은 거주, 고용, 투표, 교육, 그리고 연방기금으로 운용되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삶의 많은 측면에서의 불법적인 차별을 쫓고 있습니다.

“인종, 종교, 출신국, 성별 (성적 취향 또는 성 정체성 포함), 신체 장애, 또는 국적에 대한 증오를 동기로 어떤 범죄가 발생한다면, 이는 공동체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치게 됩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들이 누구라는 이유로, 그들이 어떻게 예배 드린다는 이유로, 그들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이유로, 또는 그들이 누구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희생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선 안됩니다. 다양성은 우리가 한 국민으로 존재함에 있어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다른 사람의 민권을 침해한 누구라도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증오 범죄와의 전쟁에 대한 법무부의 노력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나 자료는 www.justice.gov/hatecrimes 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민권 침해의 피해자라고 생각되면 https://civilrights.justice.gov/에 방문하여 신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